



건설 소식

CONSTRUCTION NEWS



건설업 특성 고려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 필요

1분기 4671명으로 지난해보다 15% 증가...
고층작업 많아 추락사망사고 빈번

올해 1분기 전체 산업재해자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건설업 재해자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또한 전체 사망재해자 중에서 건설업 종사자가 여전히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자수는 2만1,177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명(0.4%) 감소했다. 반면 1분기 건설업 재해자수는 4671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무려 15.1%나 증가했다. 업무상 질병을 제외한 건설업 재해자수

도 4,555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5.7% 늘었다. 건설업 재해자수는 제조업(7,759명)보다 적었지만 증가폭은 월등히 높았다. 제조업 재해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67명 늘었다.

재해 사망자수는 전업종에서 건설업이 이번에도 높았다.

올해 1분기 건설업 사망재해자수는 145명으로 전체 사망재해자 494명의 30% 가까이 됐다. 전체 사망재해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줄었지만 건설업은 단 1명만 줄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은 산업재해 예방이 취약하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전체 건설업 사망재해 가운데 5~49인 규모의 소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61명으로 42%나 됐다. 질병을 제외한 업무 도중 발생한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업종의 취약성은 더 크게 부각된다.

올 1분기 건설업의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134



명으로 전체의 42.5%를 차지, 절반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제조업의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77명이었다. 건설업의 업무상 사망사고 발생 유형별로 보면 추락에 의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한 숫자는 67명으로 전체 추락 사망자(90명)의 74%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건설현장 사망자의 거의 대부분이 추락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높은 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건설현장 특성상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충돌에 의한 사망이 11명이었고 낙하 사망자가 9명, 전도와 협착으로 각각 6명이 사망했다. 문제는 이런 건설업 재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업 재해자수는 2007년부터 최근 5년간 전체 산업재해자의 20% 이상을 차지해 왔으며, 그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규직, 고정사업장 중심인 현재 산업안전 관련 제도가 건설업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건설업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면서 “수주를 하기 위해 제살깎이 경쟁을 하면서 노무비를 가장 먼저 줄이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0만명 이상’ 도시지역, 재해대비 급수시설 설치 의무
지하저수조·급수탑 등...
환경부, 대상 지자체 20곳 전망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지역은 재해 발생에 대비해 재해 대비 급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재해대비 급수시설은 정전이나 지진 등으로 차량을 통한 급수조차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인구 밀집지역에 설치되는 지하저수조와 급수탑, 응급 수도전 등을 말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재해 대비 급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20개 정도 될 것으로 추정했다.

개정 법안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장 시설용량이 일일 1만㎥ 이상이면 취·정수장에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정수지나 배수지에는 수소이온농도(pH)와 잔류염소 등을 측정하는 수질자동측정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생물감시장치는 하천 등의 오염사고나 독성물질 유입을 물벼룩이나 물고기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하는 장치다.

상수도시설에 외부침입을 막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원수 사용이 불가능했던 농어촌용수도 비상시 원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가뭄 등 비상상황이 되면 농림수산물부 장관과 협의해 농어촌용수를 음용이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전이나 지진 등으로 운반 급수가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의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수도시설에 대한 안전, 보안 기준도 강화돼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환경부 고시로 운영되던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가운데 정수처리 기준과 주기, 절차를 시행규칙에 규정했고,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및 지방상수도 인가권을 유역환경청장에 위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법안에 담겼다.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사업 본격화

총350억 투입...
환경부-국토부 경포호서 시공식 가져



총 사업비 350억원이 투입되는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선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5월 16일 환경부와 국토부는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선도사업' 기공식을 경포호 인근 사업부지에서 유영숙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선도사업'은 녹색 건축과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6대 분야 68개 첨단 친환경 녹색기술이 집약된 미래 저탄소 녹색도시의 축소판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선도사업을 통해 냉난방 에너지 100%를 지열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절반 이상(55%)도 신재생에너지가 사용된다.

화석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절약되는 에너지는 연간 96만kWh 정도로 285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에너지 절약으로 줄어드는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중형 승용차가 서울-부산을 2,700회 이상 왕복했을 때 발생하는 양과 맞먹는다고 환경부는 추산했다.

선형으로 설계된 선도사업 지역의 건물 지붕은 태양열 집열판과 옥상녹화를 통해 열효율을 높이고 빗물을 흡수, 저장할 수 있어 모은 빗물을 청소용수나 정원조경수로 활용하도록 했다.

3중 단열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했고, 시설별로 에너지 사용량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도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녹색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각종 지원체계를 완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20년까지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 사업을 완공할 방침이며, 경포호 습지복원 등 29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